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4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해설지

정답표							
1	3	6	4	11	3	16	4
2	5	7	1	12	5	17	2
3	5	8	5	13	4	18	2
4	2	9	2	14	4	19	5
5	1	10	5	15	4	20	5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답 해설] A는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③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사회적 최소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오답 선지 설명] ①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②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④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⑤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학급 회의에서 토의를 통해 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도 정치로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정답 해설]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법에만 권위가 발생한다고 본다.

[오답 선지 설명] ① 입법자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②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모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한 모든 시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3. 기본권 유형

[정답 해설] A는 행복 추구권이다. ⑤ 행복 추구권은 행복 추구에 필요한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오답 선지 설명]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② 헌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는 사회적, 참정권, 청구권이다. ③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④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최고 이념을 규정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정답 해설]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에는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가 나타나 있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는 문화 국가의 원리와 복지 국가의 원리가 나타나 있으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에는 문화 국가의 원리와 자유 민주주의가 나타나 있다. 이를 종합하면 A는 국민 주권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 C는 문화 국가의 원리, D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② 보통 선거의 실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실현 방안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오답 선지 설명] ① 사법부의 독립을 통한 국민의 자유권 보장을 실현 방안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③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초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이다. ④ 정부가 경제에 관한 각종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⑤ 헌법의 모든 기본 원리는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답 해설] A는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심사, B는 위헌 법률 심판, C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D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심사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한다.

[오답 선지 설명] 나. 같이 청구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이 갑의 집회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기는 하지만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갑의 본질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 같이 청구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해당 명령을 발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로, 대법원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한 △△법 시행 규칙은 효력을 잃는다.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정답 해설] 대통령이 주요 권한을 행사할 때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으로 구성된 행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인 9인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를 종합하면 A는 대통령, B는 행정각부, C는 국무총리, D는 헌법재판소, E는 대법원, F는 국회이다. ④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고, 국무회의의 나머지 구성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이다(헌법 제88조).

[오답 선지 설명] ① 대법원의 재판관을 포함하는 모든 법관과 헌법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③ 대통령과 국회

모두 대통령 직속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감사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행정각부의 장, 국무총리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

7.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정답 해설]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B는 지방 의회이다.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편성한다.

[오답 선지 설명]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③ 지방 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과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모두 중앙 정부와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간에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나지 않는다.

8. 정치 참여 집단

[정답 해설]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 D는 언론이다. ⑤ 언론과 달리 정당은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권을 획득하여 정당을 실현하고자 한다.

[오답 선지 설명] ① 정당은 공천을 통한 정치적 충원이라는 정치 과정에서의 투입을 담당하고, 이는 근대부터 지금까지의 간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이다. ② 정당은 언론과 달리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정당, 시민 단체와 달리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④ 시민 단체와 언론 모두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하는 기능을 한다.

9. 정부 형태

[정답 해설] t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t+2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갑, 을, 병 3명의 행정부 수반은 무조건 선출된다. 주어진 기간 동안 정부 형태는 1회만 변경되었으므로 가능한 정부 형태의 조합은 아래 [표 1]의 <1>~<4> 뿐이다.

[표 1]

	갑	을	병
<1>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2>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3>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4>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예컨대 위 [표 1]의 <1>은 갑과 을 임기 동안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고, 병의 임기 동안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4> 각 경우별 행정부 수반의 임기와 t~t+2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1	갑		을		병										
	t대 의회		t+1대 의회		t+2대 의회										
△ 2	갑		을		병										
	t대 의회		t+1대 의회		t+2대 의회										
△ 3	갑		을		병										
	t대 의회		t+1대 의회		t+2대 의회										
△ 4	갑		을		병										
	t대 의회		t+1대 의회		t+2대 의회										

예컨대 위 [표 2]의 <1>에서 갑과 을의 임기는

4년, 병의 임기는 5년이고, t대, t+2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 t+1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ㄱ.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의 의회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하므로 행정부 수반은 해당 정당 소속이다. 만약 과반의 의회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그 정당이 아니라면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할 때 t대 의회에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C당이 있는 상황에서, 갑의 소속 정당이 A당이라면 갑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로 선출되었다. 갑이 대통령제로 선출되는 <1>, <2> 경우 모두 t+2대 의회 의원의 임기 중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ㄴ. t+1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3년 만에 종료되는 경우는 <1> 뿐이다. <1>에서 t+2대 의회 의원 임기 동안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은 환부거부(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 선지 설명]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의 의회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하므로 행정부 수반은 해당 정당 소속이다. 만약 과반의 의회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그 정당이 아니라면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할 때 만약 갑, 을, 병의 소속 정당이 A당으로 같다면, A당이 아닌 원내 과반 의석 정당이 존재하는 t대, t+1대 의회의 의원 임기 동안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만약 갑, 을, 병의 소속 정당이 C당으로 같다면, C당이 아닌 원내 과반 정당이 존재하는 t+1대, t+2대 의회의 의원 임기 동안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두 경우 모두 행정부 수반은 t+1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갑, 을, 병의 소속 정당이 B당으로 같다면, 위의 원리에 따라 t대, t+2대 의회의 의원 임기 동안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그런데 이는 t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t+2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정부 형태는 1회만 변경되었다는 조건에 반하므로 모순이다. ㄷ. 의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t+2대 의회 의원 임기 동안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 경우는 <3>, <4>이다. 두 경우 모두 갑의 임기 동안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10. 선거 분석

[정답 해설] 주어진 의회 의석수를 통해 의회 의석률을 구할 수 있다. 구하는 방법은 '(각 정당별 의회 의석수)/(총 의석수=300)×100%'이다. 또한 'G값'은 (의회 의석률)/(정당 득표율)이므로 주어진 'G값'과 앞서 구한 의회 의석률을 통해 정당 득표율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갑국의 현재 의회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단위 '%'는 생략.)

[표 3]

	A당	B당	C당	D당	E당
의회 의석률	51	27	13	2	7
정당 득표율	25	50	10	8	7

⑤ 다가오는 의회 의원 선거의 각 정당별 득표율은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갑국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일치하므로 다가오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의 득표율은 25%, B당의 득표율은 50%, D당의 득표율은 8%이다. 의회 의원 300명 전원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정당 득표율은 의회 의석률과 일치하므로 다가오는 의회에서 A당의 의석률은 25%, B당의 의석률은 50%, D당의 의석률은 8%이다. 이를 현재의 의회 의석률과 비교했을 때 A당의 의회 의석률은 1%p 줄었고, B당의 의회 의석률은 23%p, D당의 의회 의석률은 6%p 늘었으므로 A당은 B당, D당과 달리 <개편안>에 반대할 것이다.

[오답 선지 설명] ①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② 'G값'이 1보다 크면 의회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보다 크므로 해당 정당은 과대 대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갑국에서 과대 대표된 정당은 A당, C당 2개이다. 한편, <개편안>을 적용하면 의회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이 일치하므로 과대 대표되는 정당은 없다. ③ 가장 최근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A당 소속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인 51%를 득표하였으므로 2차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A당 소속 후보자가 유권자 과반의 표를 획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④ 다가오는 의회 의원 선거의 각 정당별 득표율은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갑국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일치하므로 다가오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B당의 득표율은 50%이다. 해당 선거에서는 의회 의원 300명 전원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므로 B당의 의회 의석수는 300석의 50%인 150석이다. 이때는 과반을 득표한 정당이 없으므로 해당 선거 결과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정답 해설] 주어진 자료에 부각된 민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③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다.

[오답 선지 설명] ① 소유권의 공공성보다 절대성을 강조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② 정부가 개발 금지 규역을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④ 계약 상대방, 계약 체결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⑤ 계약 공정의 원칙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보완하면서 등장하였다.

12. 미성년자의 계약

[정답 해설] ⑤ 무는 병과 달리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무는 병과

달리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게 할 권리를 일방적 의사 표시로 소멸시킬 수 있다. 즉, 무는 병과 달리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오답 선지 설명] ① ㉠과 ㉡ 모두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여야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다. ② 갑의 법정대리인은 갑과 병이 체결한 계약을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병의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 ③ 병은 부모도 없이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계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의 확인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정에게는 계약 철회권이 없다. 그 이유는 무가 미성년자임을 정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에게 계약 취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계약 철회권은 그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13.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정답 해설] ④ 병은 을이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되었으므로 을은 병의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정에 대한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을은 병의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않는다.

[오답 선지 설명] ① 음식을 제시간에 배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갑에게 지는 사람은 갑과 자장면 배달 주문 계약을 체결한 을이다. ② 정은 B에게 애완동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은 B에게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③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은 법정대리인은 B와 정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B는 정은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A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면제된다면 을은 B와 달리 A, 병, 정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4.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정답 해설] 제2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4조는 다른 사람의 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기까지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제2조에서 범죄로 구성된 행위가 제4조에서 범죄로 구성된 행위보다 가벼운데, 제2조의 형벌 규정이 제4조의 형벌 규정보다 무거우므로 제2조는 제4조와 비교해 볼 때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학생2의 판단은 옳다. 그런데 교사는 한 사람은 옳게, 한 사람은 틀리게 판단했다고 하였으므로 (가)에는 틀린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 ④ 제4조는 집에 침입해 타인을 상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은행에 침입해 타인을 상해한 행위에 대하여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관의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지는 입법자의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오답 선지 설명] ① 제1조에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순서대로 나타나 있다. ② 제2조 개정 후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한 행위에 대하여 개정 전 제2조를 적용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하나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 법규는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한 10년의 기간 중 제3조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 5년 간의 무단 거주 행위까지 소급하여 제3조의 '10년 이상 점거한' 기간에 삽입하여 계산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⑤ 제2조에 규정된 징역과 제4조에 규정된 구류는 모두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15.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정답 해설] [문항 1]의 첫 번째 답안과 두 번째 답안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특징이다. 한편, [문항 2]의 첫 번째 답안은 총회만의 특징이다. 만약 B가 총회라면 (가)에는 총회만의 특징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B가 총회가 아니라면 (가)에는 B만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④ 국제 평화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므로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또한 ㉠이 0점이면 A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될 수 없으므로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따라서 (가)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직접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주어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총회와 국제 사법 재판소의 공통된 특징이므로 (가)에 해당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

[오답 선지 설명] ① B가 총회이면 (가)에는 총회만의 특징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총회는 출석 투표국 과반의 찬성으로 일반 안전을 의결하므로 (가)에 해당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 ② ㉠이 2점이면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③ ㉠이 2점이면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매년 총회에서 5개국씩 선출되므로 C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이다.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을 가지거나 가입국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가)에 '결의안은 구속력을 가지며 가입국을 강제한다.'가 들어갈 수 없다. ⑤ 국제 연합에는 국제법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이 없으므로 B가 어떤 기관이든 (가)의 내용에는 0점이 부여된다. 따라서 B는 총회이다. 또한 ㉠이 0점이면 A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될 수 없으므로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관할하는 법적 분쟁에는 국가만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제기구 등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16. 가족 관계

[정답 해설] ④ 친양자 입양은 법률혼 관계의 부분만 할 수 있으므로 B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병의 진술을 통해 을과 병은 법률혼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지는 사실혼 관계의 부(父)가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C를 인지했다는 갑의 진술을 통해 갑과 정은 사실혼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과 병의 혼인은 갑과 정 의 혼인과 달리 혼인 신고라는 혼인 성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오답 선지 설명] ①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A, C이다. ② E의 친족은 을, 병, B이다. ③ 면접교섭권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도 갖는 권리이다. ⑤ 병은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갑과 B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갑은 더 이상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을은 여전히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범죄 성립 요건

[정답 해설] ㄷ. 정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되려면 그에 앞서 정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의 변호인은 을에 대한 정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정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재판부는 정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정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여부는 해당 재판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

[오답 선지 설명] ㄱ. 행위가 범죄 전제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의 절취 행위는 강요에 의한 것이고 강요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부는 갑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이다. ㄴ.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서 가지는 행위이다. 그러나 을이 병의 지갑을 가져가는 것은 관찰카메라 촬영을 위한 연출이자 연기였다. 즉, 을이 병의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업무로 인한 행위임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정답 해설] 갑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을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분쟁을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오답 선지 설명] ① 국제 협약과 국제 관습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③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모두 원칙적으로 독립된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라고 본다. ④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모두 국제 사회에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19.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정답 해설] ㄱ.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

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갑이 지방 노동 위원회에 신청한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으므로 지방 노동 위원회는 A 회사가 갑을 해고한 것이 부당 노동 행위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A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신청이 인용되었으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는 A 회사가 갑을 해고한 것이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2심 재판이 피고의 항소로 진행되었으므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해당 재판의 원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갑이므로 1심 재판부는 A 회사가 갑을 해고한 것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단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다. ㄴ. 갑이 지방 노동 위원회에 신청한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으므로 A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가 A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의 신청자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원고는 A 회사로 같다.

[오답 선지 설명] ㄴ.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A 회사는 갑에게 사전 예고 없이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갑은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갑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상관 없이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 소송이므로 행정 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다.

20.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정답 해설] ⑤ 갑은 집행유예 판결이, 을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선고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사회봉사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오답 선지 설명] ① 구속 적부 심사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갑은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석방되지 않은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구속된 것이 아니다. ② 갑과 을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령해 줄 것을 1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갑은 항소심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1심 공판 단계에서 구속되어 있는 갑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을은 1심 공판 단계에서 구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 ④ 2심 법원은 갑에게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인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